환경투자 지원제도 개선 시급

상의 분석, 활용률 10.5%이하 … 지원대상 대폭 확대해야

국내기업들은 환경투자시 자금 및 기술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.

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「산업환경분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」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현행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4~95년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은 금융지원제도가 6.4%, 세제지원제도 10.5%, 기술지원제도 5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투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

(단위 : %)

구 분	해당되지않음	제도를알지못함	복잡한절차	기타	합계
금융지원제도	48.8	17.8	13.0	20.4	100.0
세제지원제도	51.2	25.4	10.9	12.5	100.0
기술지원제도	65.8	14.5	9.8	9.9	100.0

2년간 환경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31.1%를 제외하더라도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현행제도의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고 홍보 부족,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점 때문으로 조사됐다.

현재 정부가 환경개선지원자금, 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의 금융지원과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조사결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의 존재여부 조차 모르는 기업이 20%에 달했다.

기업들의 최대애로점인 자금문제와 관련, 현행 금융지원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재활용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공해방지시설은 시설담보로 인장되지 않아 기업에서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등 융자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시설 가동시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,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등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.

<화학저널 1996/3/11>